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정착 의향과 관련 요인: 영암 · 논산 · 밀양을 사례로*

유희연**

Factors Related to Local Settlement Intention among Foreign Migrant Workers in Depopulation Regions: A Case Study of Yeongam, Nonsan, and Miryang*

Heeyoun You**

요약 :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인 전남 영암군, 충남 논산시, 경남 밀양시를 사례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체류실태, 지역간류 의향 및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간류의향률은 논산(69.8%), 밀양(65.2%), 영암(42.6%)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국소속감은 지역 간류의향과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이는 체류자격별 하위표본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반면 동네 관계망과 생활만족도는 전체 표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특정 체류자격 하위표본에서는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나타내, 간류의향 관련요인이 체류자격별 하위표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정착 지원정책이 단일 요인 중심의 획일적 접근에서 벗어나, 생활기반 안정과 체류자격별 이질성을 함께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의향, 지역간류 의향, 지역소속감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residency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and their local residential stay intention, along with related factors, focusing on Yeongam-gun (Jeollanam-do), Nonsan-si (Chungcheongnam-do), and Miryang-si (Gyeongsangnam-do)—depopulation regions in South Korea. Residential stay intention rates differed significantly by region, in the order of Nonsan (69.8%), Miryang (65.2%), and Yeongam (42.6%).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ense of belonging to one's home country had a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 with local residential stay intention, a finding that remained consistent across visa-status subsample analyses. By contrast, neighborhood social ties and life satisfaction were not significant in the full sample but showed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s in certain visa-status subsamples, suggesting that the factors related to residential stay intention may vary by visa statu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support for migrant workers' local settlement should move beyond a uniform approach centered on a single factor, toward differentiated strategies that jointly consider stable livelihood foundations and visa-status-based heterogeneity.

Key Words : Depopulation region, Local extinction, Foreign migrant workers, Local settlement intention, Local residential stay intention, Sense of belonging

*본 연구는 국토연구원 2024년 기본과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연구」 내용을 토대로 추가 분석을 수행한 것임.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hyyou@krihs.re.kr)

I. 서론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초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해 본격적인 인구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 또한 심화되고 있다. 생산인구의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우영옥, 2023; 한기덕, 2025; 조하영, 2026). 제조업·농업·어업 등 지역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이미 지방 산업 생태계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잡았으며, 중앙정부 역시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생활인구 정의에 외국인¹⁾을 포함하고,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의 지방 유입과 정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2025년 발표한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²⁾(시·군·구 기준)은 2019년 93곳에서 2024년 142곳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인구감소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9곳(20.4%)에서 52곳(36.6%)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국인의 자연적 인구감소와 청년층 유출 등 사회적 인구감소가 외국인의 증가와 맞물리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

그러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 유입이 곧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배정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권역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현상이 여전히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연翰뉴스, 2025). 이에 따라 지역 내 외국인 인구의 지속적인 정착 여부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실효성과 직결된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즉, 과거의 이민정책이 ‘어떤 외국인을 어느 정도 규모로 받아들일지, 한정된 국내 체류기간 동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유입된 외국인이 특정 지역사회 안에서 기존 주민들과 조화롭게 장기거주할 수 있을 것인가’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다(조영희, 2024; 한기덕, 2025).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지역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고용 연계를 넘어, 지역 내 생활 여건·사회적 관계·소속감 등 다차원적 요인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김영란, 2008; 최윤정 등, 2025).

하지만 국내 이주민 연구 중 특정 지역사회 내 이주민

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부족하며(최선영, 2024; 한기덕, 2025), 정책수립 과정에서 이주민의 지역 정착에 관한 학문적 근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이라는 특수한 공간적 맥락에서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정착 의향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최인지·신형진, 2019; 이은채, 2025).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속적인 정주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정착 의향에 주목하여, 2023년 기준, 인구감소지역 중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3개 지역(전남 영암군, 충남 논산시, 경남 밀양시)을 사례로 이들의 체류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정착 의향과 그 관련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지역정착 의향은 설문에서 측정가능한 범위의 ‘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잔류의향’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분석한다. 다만,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공간적 조건 자체의 효과를 검증하기보다,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공통된 맥락 속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잔류의향 관련요인과 지역 간 차이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사례지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체류실태는 어떠한가?
- 2) 지역잔류의향 집단과 이사회망 집단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지역별 잔류 의향을 격차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 3) 사례지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잔류 의향과 관련된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개념적 정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지역정착 의향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개념이 워낙 방대해 세부적인 구분 없이는 분석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 체계 중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격을 기준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첫째, 취업자격비자(유입형)로 E계열 전체(E-1~E-10) 및 동포 대상 비전문분야 취업자격인 H-2⁴⁾에 해당하며, 전문인력(E-1~7)과 단순기능인력(E-8~10, H-2)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정주형(기타) 자격은 거주, 동포, 영주, 결혼이민 등의 자격으로 체류하지만,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취업가능 체류자격으로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 단기취업(C-4)은 90일 이하 취업·영리활동 종사자이고, 관광취업(H-1)은 협정에 의한 취업 종사자

로 협정된 기간에 따라 체류 가능기간이 상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표 1 및 그림 1).

이주민 관련 선행연구는 그동안 이주민의 ‘지역정착’보다는 ‘사회통합’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유희연 등, 2024).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일반적으로 이주자가 유입국의 구성원으로서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참여를 통해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국제이주기구, 2011; 신지원, 2011). 한편, 정책 현장에서는 이주민의 정착 과정을 ‘유입-정착-통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뉴질랜드 이민청⁵⁾은 유입 후 약 18개월에서 2년 사이의 적응기간을 정착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박민정 등(2023)은 외국인정책의 기본 틀을 ‘유입-정착-통합’의 세 단계로 제시하면서, 정착

표 1. 체류자격 체계 중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격체계

취업가능 체류자격	유입형	전문인력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행행), E-7(특정활동)
		단순기능인력	E-8(계절근로),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구직활동	정주형	기타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C-4(단기취업), H-1(관광취업)은 본 연구에서 제외
		유학생	D-2(유학생), D-10-1(구직 중인 유학생)
		창업	D-10-2(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외국인)

* 표에서 붉은색 테두리로 표기한 부분이 본 연구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분석대상에 해당.

자료 : 김연홍(2017), 정동재 등(2019)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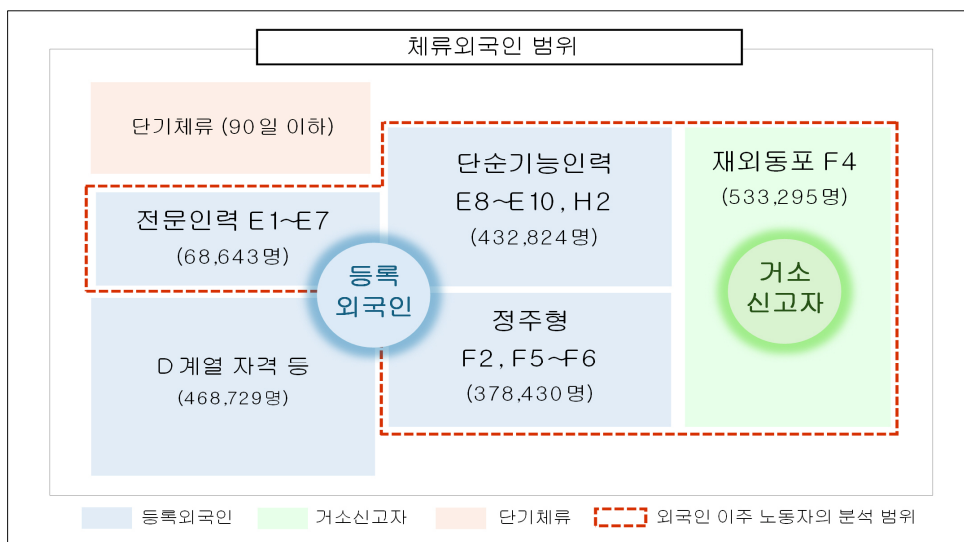


그림 1. 외국인 이주노동자 분석범위

자료 : 저자 작성.

단계에서는 체류외국인이 체류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제도 이해를 바탕으로 체류안정성, 고용 및 주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이주민의 지역정착(local settlement)’은 “이주 후 일정 기간 내에 삶의 질 측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해당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으로 정의해볼 수 있다. 이때 삶의 질은 이주민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이 얹힌 다차원적 개념이며, 이에 따라 이주민의 지역정착 의향 역시 단일 요인이 아닌 여러 차원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박민정 등, 2023; 유희연 등, 2024).

2. 지역정착 의향 영향요인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혹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특정 지역 내 지역정착 의향을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한기덕, 2025), 방법론적으로도 데이터 구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주로 질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리학·사회학 등 사회과학 제 분야에서는 이주민의 지역정착 의향을 측정하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Speare(1974)는 Wolpert(1965), Brown and Moore(1970)의 스트레스-역치 모형(stress-threshold model)을 발전시켜 주거 불만족이 이사 의사와 실제 이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규명하였는데, 주거 만족도가 이사확률에 유의미한 간접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임을 밝혔다. 이후 후속 연구들은 여기에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유대(social bonds)를 추가하여, 거주 만족도 뿐 아니라 이웃 관계망과 지역사회 결속 또한 이동 의향을 억제하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Speare *et al.*, 1982; Oh, 2003).

최인지·신형진(2019)은 이주민의 정주이민 또는 영구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학적 변수(외국인 노동자의 국적), 사회경제적 배경(교육수준, 월 평균소득), 체류기간과 언어, 가족 관련 변수(결혼상태, 가족동반 및 친인척 국내거주여부), 기타 통제변수(한국생활 만족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 국내 배우자 유무, 한국어 능력, 한국생활 만족도 등이 체류 연장 희망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덕(2025)은 경복을 사례로 한 이주민의 지속정주

의향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주거환경 만족도, 취업 상태, 동네 소속감이 지역정착 의향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임을 밝혔다. 이원규·이재우(2025)는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만족도가 이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조하영(2026)은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도적 유도만으로는 장기 정주가 담보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요건을 맞추기 위한 과도한 근무시간, 자녀의 양육·교육 환경 부재가 지역 장기거주 및 미래전망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전성윤·전희정(2024)은 외국인의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관계적 요인(이웃과의 교류, 한국어 능력), 법적 요인(체류자격), 문화적 요인(출신국가, 인종, 거주기간), 환경적 요인(주거환경 만족도, 도시안전 만족도) 등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주민의 소속감은 이웃 간 교류, 한국어 능력이 지역 수준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주민의 정착과정을 출신국과의 관계 속에서 재 해석하는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관점도 이주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Basch, Glick Schiller and Szanton Blanc, 1994). 초국가주의는 이주민이 거주국에 정착한 이후에도 출신국과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유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두 국가에 걸친 다중적 소속(multiple belonging)을 형성한다는 관점이다. 다만 이 관점의 핵심은 이주민의 삶을 출신국-거주국이라는 단일 국가 단위를 넘어 초국적 공간에서 조망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문제의식에 있으며, 출신국과의 유대가 강할수록 거주국 정착이 약화된다는 일방향적 인과를 상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출신국과의 사회적·경제적 연결망은 거주국에서의 정착을 저해하기보다 뒷받침하는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초국적 이주자 기업활동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적되어 왔다(Levitt and Glick Schiller, 2004). 즉 초국가주의 관점에서 출신국과의 유대와 거주국 정착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 공존 가능한 관계로 이해되어 왔다.

이상의 이주민 지역정착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이주민의 지역정착 의향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혼인상태, 체류기간, 경제활동 여부 등), 심리적 특성(거주환경 만족도, 생활만족도, 지역소속감, 차별의식), 제도적 요인(정책 서비스 충분도)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이주민의 지역 정착 개념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지역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밝혔다.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공간적 범위의 측면에서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정착 의향 관련 실증연구는 특정 지역 맥락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최인지·신형진(2019)과 전성운·전희정(2024)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 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이질성을 다루지 않았으며, 한기덕(2025)은 경북이라는 단일 광역단위를 사례로 하여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큰 산업구조나 체류자격 구성의 차이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은 특정 이주민 집단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이원규·이재우(2025)는 비전문취업(E-9) 노동자만을, 조하영(2026)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실제로 체류하는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폭넓게 포괄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공간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초점을 맞춰 산업구조와 지역 여건이 상이한 영암군, 논산시, 밀양시 세 지역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동일하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도 지역 여건에 따라 정착 의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한다. 둘째, 연구 대상 측면에서 본 연구는 특정 이주민 집단에 한정하지 않고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폭넓게 포괄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적 맥락에서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자료는 국토연구원이 2024년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이다. 해당 조사의 사례지역은 2023년 기준 인구감소지역 중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지역으로, 전남 영암군(7,403명), 충남 논산시(4,769명), 경남 밀양시(4,015명) 순이다.

세 지역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산업구조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체류 특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영암군은 조선·기계공업 집단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HD현대삼호와 대불국가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서 삼호읍을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가 증가했으며, E-9(49.0%)의 비중이 세 지역 중 가장 낮은 대신 E-7(17.5%), F-4(15.0%)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선업 관련 숙련인력과 동포 인력이 함께 유입되는 구조를 보인다.

반면, 논산시(E-9 64.0%)와 밀양시(E-9 72.8%)는 E-9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단순노무 중심의 체류자격 구조가 뚜렷하다. 특히 이들 지역의 E-9 종사자 내부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논산시는 총 3,050명 중 제조업(E-9-01) 1,012명, 농업(E-9-03) 2,009명으로 농업 종사자 비중이 더 높으며, 밀양시 역시 총 2,922명 중 제조업(E-9-01) 1,063명, 농업(E-9-03) 1,725명으로 농업 종사자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 두 지역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세 지역의 특성을 종합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해당 조사의 모집단은 위 사례지역 내 91일 이상 체류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이며, 조사는 각 지역의 외국인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표 2. 사례지역 특성 비교

구분		영암군		논산시		밀양시	
위치		전라남도 서남부		충청남도 남동부		경상남도 북동부	
주요 산업		제조업(조선업)		농업·제조업		농업·제조업	
외국인 이주노동자		7,403명		4,769명		4,015명	
유형별 외국인 이주노동자 현황	전문인력	1,313명	17.7%	108명	2.3%	153명	3.8%
	단순기능인력	3,906명	52.8%	3,465명	72.7%	3,227명	80.4%
	정주형	2,184명	29.5%	1,196명	25.1%	635명	15.8%

자료 : 법무부(2023) 토대로 저자 작성, 주 : 본 연구의 응답표본인 표 4와는 상이함.

장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하고, 훈련된 조사원을 현장으로 파견해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한 뒤, 사례지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국적을 고려하여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총 5개 언어로 제작되어 언어 장벽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최종 유효 응답자는 총 180명으로, 지역별로 영암군 61명(33.9%), 논산시 53명(29.4%), 밀양시 66명(36.7%)이다. 응답자의 세부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체류 특성은 4장 1)절에서 상세히 다룬다.

2. 분석변수

앞의 2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 정착 의향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주관적 판단이다. 다만 ‘지역정착 의향’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나 생활기반의 안정화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설문조사상 단일 문항(“현재 거주지역 외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가”)만으로 이를 온전히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이 실제로 측정하는 바, 즉 현재 거주지역에서 이동 없이 머무르고자 하는 의향을 ‘지역 잔류의향’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위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역코딩하여, 이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잔류의향 있음)를 1, 이사를 희망하는 경우(잔류의향 없음)를 0으로 하는 이진변수(binary variable)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역정착이라는 광의의 개념 전체가 아니라, 이러한 조작적 정의의 범위 내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소속감, 동네 관계망, 환경만족도, 생활만족도, 경제활동 여부로 설정하였다. 소속감은 이주노동자가 ①모국, ②한국사회, ③지역사회 각각에 대해 느끼는 소속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당신은 태어난 국가(모국)/한국사회/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이다”라는 문항을 구성하고, 5점 척도(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동네 관계망은 “우리는 서로 알고 지낸다”, “우리는 동네에 관한 일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는다”, “나는 동네의 행사·모임에 참여한다”의 4개 문항을 5점 척도(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한 뒤, 그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환경만족도는 ①주거환경(주택, 교통, 녹지 등), ②경제환경(구직, 소득, 근로시간 등),

③복지환경(의료, 사회보장 등), ④사회환경(외국인 배려, 포용성 등), ⑤교육환경(교육비, 교육기회 등)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5점 척도(①매우 불만족한다 ~ ⑤매우 만족한다)로 측정한 뒤,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생활만족도는 “귀하는 본국에서의 삶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아래 ①건강상태, ②재정 및 경제상태, ③주위 친지 및 친구와의 관계, ④가정생활, ⑤직장 및 학교에서의 사회생활의 5개 영역에 대한 행복 정도를 5점 척도(①매우 불행해졌다 ~ ⑤매우 행복해졌다)로 측정한 뒤, 그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이 문항은 본국에서의 삶과 비교한 상대적 평가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생활만족도와 구분되며, 본 연구의 생활만족도는 이주 이후 삶의 상대적 개선에 대한 인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 여부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진변수로 측정하였으며(경제활동=1, 비활동=0), 응답자의 89.4%(161명)가 경제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변수가 지칭하는 공간적 스케일은 상이하다. 종속변수의 ‘현재 거주지역’은 시·군 단위를, 동네 관계망은 근린 단위를, 소속감은 모국(국가)·한국사회(국가)·거주지역(시·군)의 세 공간적 수준을 각각 지칭한다. 본 연구는 이들 간의 위계적 관계를 모형화하지 않고 병렬적으로 투입하였으므로, 결과는 각 공간적 수준에 대한 인식이 잔류의향과 개별적으로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소속감과 생활만족도 등은 지역잔류 의향과 개념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들 변수와 잔류의향 사이의 엄밀한 인과적 선후관계를 설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지역 소속감은 잔류의향을 형성하는 심리적 기반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실제 지속 거주 경험의 결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만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변수 간 인과적 방향성을 확정하기보다, 이들이 잔류의향과 함께 나타나는 관련요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였다.

통계변수로는 성별(남성=1), 혼인상태(기혼=1), 체류기간(입국연도 기준 연속변수), 연령(출생연도 기준 연속변수), 사례지역(논산을 기준집단으로 한 영암·밀양 더미변수), 체류자격을 포함하였다. 사례지역 더미변수의 기준집단은 세 지역 중 잔류의향률이 가장 높은 논산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암·밀양의 지역잔류 의향이

논산 대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낮게 나타나는지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중 체류자격 구성에 상당한 편차가 있어 지역 더미 변수 효과가 체류자격 구성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체류자격은 단순기능인력(E-8~9)⁶⁾을 기준집단으로 하고, 전문인력(E-1~7)과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정주형(F계열) 체류자격 군(F-2, F-4, F-5, F-6)을 각각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분산팽창

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지역 더미변수와 체류자격 더미변수 간 VIF는 최대 3.26으로 다중공선성 우려 기준(VIF>5)을 밑돌아, 두 변수군을 하나의 모형에 함께 투입하는 데 통계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표 3 참조).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응답자의 인구통계적·체류 특성 및 주요 변수의 분포를 파악하고, 사례지역별 특성 차이를 비교하였다. 둘째, 카이제곱 검정 및 독립표본 t-검정을

표 3. 변수 정보

구분	변수	측정문항	변수 설명
종속변수	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잔류 의향	현재 거주지역 외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습니까?	있음/없음
독립변수	소속감	(모국소속감) 나는 태어난 국가에 소속된 사람이다.	5점 척도
		(한국사회 소속감) 나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이다.	5점 척도
		(지역 소속감) 나는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이다.	5점 척도
	동네 관계망	우리는 서로 알고 지낸다	5점 척도
		우리는 동네에 관한 일을 이야기한다.	5점 척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는다	5점 척도
		나는 동네의 행사/모임에 참여한다.	5점 척도
	환경만족도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관련하여 세부항목별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5개문항 평균
		①주거환경(주택, 교통, 녹지 등)	5점 척도
		②경제환경(구직, 소득, 근로시간 등)	5점 척도
		③복지환경(의료, 사회보장 등)	5점 척도
		④사회환경(외국인 배려, 포용성 등)	5점 척도
		⑤교육환경(교육비, 교육기회 등)	5점 척도
	생활만족도	귀하는 본국에서의 삶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개문항 평균
		①건강상태	5점 척도
		②재정 및 경제상태	5점 척도
		③주위 친지 및 친구와의 관계	5점 척도
		④가정생활	5점 척도
		⑤직장 및 학교에서의 사회생활	5점 척도
	경제활동여부	귀하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있음/없음
통제변수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성/여성
	혼인상태	귀하의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미혼/기혼/이혼·사별
	체류기간	귀하는 언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까?	년
	연령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세
	사례지역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영암/논산(기준집단)/밀양
	체류자격	귀하의 현재 체류자격(비자)은 무엇입니까?	전문인력/단순기능인력(기준집단)/정주형(F계열)

자료 :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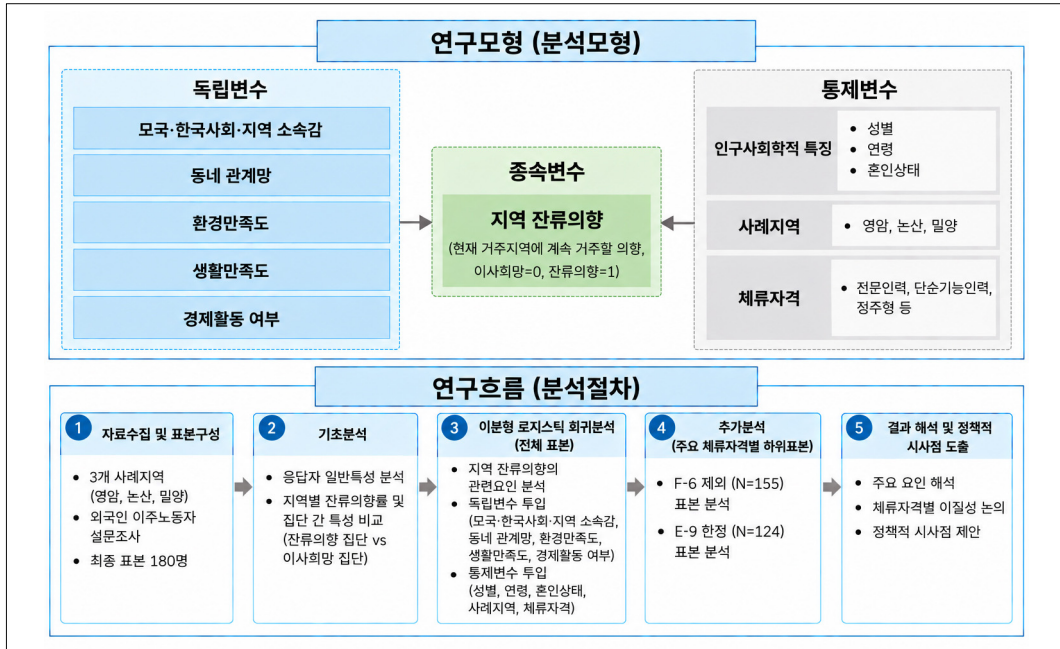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및 흐름

자료 : AI 생성기 chatgpt.com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통해 지역별·체류자격별 지역 잔류의향의 분포 차이와, 잔류의향 집단 간 소속감 차이를 검정하였다. 셋째,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지역 잔류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진변수일 때 예측변수의 효과를 오즈비(odds ratio, OR)로 추정하며, 각 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를 통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였다. 넷째, 체류자격 구성에 따른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기 위해, F-6 체류자를 제외한 표본과 E-9 체류자로 한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동일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추가로 분석하였다(그림 2 참조).

IV. 분석결과

1. 사례지역별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 실태

본 절에서는 사례지역별 응답자(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체류 및 경제활동 특성, 생활환경 실태 등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요약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전

체적으로 남성(67.8%)이 여성보다 많으나 지역별 편차가 크다. 영암군은 남성이 83.6%, 밀양시는 65.2%, 논산시는 52.8%로, 세 지역 모두 남성 응답자의 비중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별 성비 차이는 표 4에 제시된 체류자격 구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설문 표본의 체류자격 비중은 표 2에서 제시한 지역 전체 통계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영암군의 경우 지역 전체 단순기능인력 비중이 52.8%인 반면 본 설문 표본에서는 88.5%로 나타나, 표본이 E-9 체류자격자에 다소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연령은 평균 32.4세(표준편차 7.1세)로 비교적 젊은 층에 해당했다.

체류자격 특성을 살펴보면,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이 124명(68.9%)으로 가장 많고, 결혼이민(F-6) 25명(13.9%), 숙련기능인력(E-7) 17명(9.4%)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류기간은 전체 4.8년이었으나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여, 논산시가 6.8년으로 가장 길고, 밀양시 4.8년, 영암군 3.0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암군이 상대적으로 최근 유입된 E-9 체류자격자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논산시는 장기 체류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주 이유는 취업이 145명(80.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가족 결합이 27명(15.0%)으로

표 4. 사례지역별 응답자 특성

구분	전체(N=180)	영암군(n=61)	논산시(n=53)	밀양시(n=66)
성별: 남성(%)	67.8	83.6	52.8	65.2
평균연령(세)	32.4	31.4	32.1	33.7
혼인상태: 미혼(%)	57.8	50.8	62.3	60.6
국적: नेपाल(%)	21.7	44.3	18.9	4.5
체류자격: E-9(%) ¹	68.9	88.5	54.7	62.1
체류자격: F-6(%)	13.9	3.3	20.8	18.2
체류자격: E-7(%)	9.4	3.3	17.0	9.1
평균 체류기간(년) ²	4.8	3.0	6.8	4.8
이주 이유: 취업(%)	80.6	90.2	77.4	74.2
이주 이유: 가족결합(%)	15.0	6.6	17.0	21.2
경제활동 여부(%)	89.4	98.4	83.0	86.4
직업: 단순노무직(%) ³	70.2	76.7	61.4	70.2
월평균 임금(만원) ⁴	235.5	244.7	235.7	226.1
만족도: 주거환경	3.6	3.3	3.5	4.0
만족도: 경제환경	3.5	3.2	3.7	3.6
만족도: 복지환경	3.7	3.5	3.8	3.9
만족도: 사회환경	3.6	3.2	3.5	3.9
만족도: 교육환경	3.6	3.3	3.8	3.7

주1 : 주요 체류자격은 본 연구 설문조사 응답자(표본) 기준이며, 표 2 지역현황통계와는 상이할 수 있음.

주2 : 평균 체류기간은 2024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입국년도를 통해 산출함.

주3 : 직업은 경제활동자(N=161)를 대상으로 산출함.

주4 : 월평균 임금은 경제활동자 중 임금문항 유효응답자(N=151)를 대상으로 산출함.

그 뒤를 잇는다.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9.4%(161명)가 현재 경제활동 중이며, 직업은 단순노무직이 113명(70.2%)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월평균 임금은 전체 평균 235만원 수준이었으며, 영암(244.7만 원), 논산(235.7만 원), 밀양(226.1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환경 만족도는 전체 평균 기준 복지환경(3.73점), 주거환경(3.62점), 교육환경(3.59점), 사회환경(3.56점) 순으로 높았고, 경제환경(3.48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밀양시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영암군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표 4 참조).

2. 사례지역별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잔류 의향 현황 및 비교

전체 응답자 180명 중 현 거주지역에 잔류의향이 있는 응답자(타 지역 이사를 희망하지 않음)는 106명(58.9%)

이며, 이사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74명(41.1%)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논산시(69.8%)와 밀양시(65.2%)에서 잔류의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영암군(42.6%)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지역별 잔류의향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10.35$, $p=.006$).

체류자격별로 보면 E-7(숙련기능인력)의 잔류의향률이 88.2%로 가장 높고, E-9(54.8%)와 F-6(60.0%)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체류자격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6.91$, $p=.032$). E-7의 잔류의향률이 높은 것은 이 체류자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장기 체류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지역($p=.006$)과 체류자격($p=.032$) 모두 잔류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지역적 맥락과 체류자격 구성이 각각 독립적으로 잔류의향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표 5 참조).

잔류의향 집단과 이사회망 집단 간 소속감을 비교한 결

표 5. 지역별·체류자격별 지역잔류 의향

구분		잔류의향 있음	잔류의향 없음 (이사회망)	합계	잔류의향률(%)	$\chi^2(p)$
지역	영암	26	35	61	42.6	10.35(.006**)
	논산	37	16	53	69.8	
	밀양	43	23	66	65.2	
체류자격	E-7	15	2	17	88.2	6.91(.032*)
	E-9	68	56	124	54.8	
	F-6	15	10	25	60.0	

* $p<.05$, ** $p<.01$.

체류자격별 분석은 표본 규모가 충분한 E-7, E-9, F-6(총 166명, 92.2%)만을 대상으로 실시.

표 6. 지역잔류 의향 집단별 소속감 비교

소속감 유형	잔류의향 있음	잔류의향 없음(이사회망)	t값	p값
모국 소속감	3.85	4.11	2.043	.043*
한국사회 소속감	3.70	3.70	0.040	.968
지역 소속감	3.78	3.76	-0.223	.824

* $p<.05$. 독립표본 t-검정 결과, t값은 이사회망 집단 평균-잔류의향 집단 평균으로 산출함.

과, 모국소속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043$, $p=.043$). 이사회망 집단의 모국소속감 평균은 4.11점으로 잔류의향 집단의 3.85점보다 높았다. 반면 한국사회 소속감과 지역소속감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에서 모국에 대한 주관적 소속감과 현재 거주지역 잔류의향 사이에 부(-)의 관련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집단 간 평균 차이만으로 모국소속감이 잔류의향을 낮추는 인과적 기제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표 6 참조).

3. 지역잔류 의향 관련요인 분석

1) 기본모형 분석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 잔류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지역별 체류자격 구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례지역 및 체류자격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최댓값은 3.26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총 180명이었으며, 모형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LLR $p=.0006$). 모형의 McFadden Pseudo R^2 는 0.160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주요 설명변수 가운데 모국소속감은 지역 잔

류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다($OR=0.517$, 95% $CI=0.327\sim0.816$, $p=.005$). 즉 다른 변수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모국소속감이 1점 증가할수록 현재 거주지역에 잔류할 오즈는 약 48.3%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모국소속감은 출신국에 대한 주관적 귀속의식을 측정한 단일 변수이며, 초국가적 행위나 관계를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출신국과의 관계 자체가 지역 잔류를 저해한다는 인과적 효과로 해석하기보다는, 본 연구의 세 사례지역에서 모국소속감과 지역 잔류의향 사이에 일관된 부(-)의 관련성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 여부는 정(+)의 방향을 나타냈으나 5% 유의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OR=4.235$, $p=.070$). 특히 95% 신뢰구간이 0.890~20.149로 넓게 나타나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결과를 경제활동이 지역 잔류의향을 높이는 확정적인 효과로 해석하거나, 이를 고용안정성 또는 고용의 질의 효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변수의 경우 논산을 기준으로 영암은 $OR=0.403$ 으로 잔류의향이 낮은 방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은 $p=.082$ 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류자격을 포함한 다른 요인을 고려한 이후에도 영암의 잔류의향이 상대적으로 낮

은 방향은 유지되었으나, 5% 유의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본 결과만으로 영암의 독립적인 지역효과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밀양은 논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OR=1.044$, $p=.927$).

한편, 체류자격 더미를 제외한 모형에서 영암의 오즈비는 $0.380(p=.061)$ 으로, 체류자격을 투입한 이후($OR=0.403$, $p=.082$)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영암의 낮은 잔류의향이 체류자격 구성의 차이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기술 통계상 영암은 거주환경 만족도가 세 지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나(표 4 참조), 지역 내 생활여건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은 후속과제로 남긴다.

한국사회 소속감($OR=0.988$, $p=.973$), 지역소속감($OR=0.938$, $p=.856$), 동네 관계망($OR=1.274$, $p=.353$), 환경만족도($OR=1.496$, $p=.143$)는 전체표본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생활만족도 역시 정(+)의 방향을 보였으나 5%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OR=1.676$, $p=.109$). 다만 특정 변수가 전체표본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요인이 지역 잔류의향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체류자격이나 이주배경 등 표본 내부의 이

질성에 따라 변수 간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 절에서는 체류자격 구성을 달리한 추가분석을 통해 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였다(표 7 참조).

2) 주요 체류자격 구성에 따른 강건성 검토

본 연구의 전체 표본은 비전문취업(E-9), 전문인력(E-7), 결혼이민(F-6) 등 상이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체류자격은 취업 가능 여부와 체류조건뿐만 아니라 가족형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이주와 정착의 조건과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체류자격 집단을 하나의 표본으로 분석할 경우 집단별 특성이 전체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F-6 체류자는 취업을 주된 목적으로 입국한 E-9 및 E-7 체류자와 이주배경과 지역 내 생활기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F-6 체류자를 제외한 모형과 E-9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국소속감은 표본의 범위를 달리하여도 지역 잔류의향과 일관된 부(-)의 관련성을 보였다. 전체 표본($N=180$)에서는 모국소속감이 1점 증가할 때 지역 잔류의향의 오즈가 약 48.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R=0.517$, $p=.005$), F-6 체류자를 제외한 분석($N=155$)

표 7. 지역잔류 의향 관련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오즈비(OR)	95% 신뢰구간	p값	유의성
모국 소속감	0.517	[0.327, 0.816]	.005	**
한국사회 소속감	0.988	[0.493, 1.982]	.973	
지역 소속감	0.938	[0.473, 1.861]	.856	
동네 관계망	1.274	[0.765, 2.122]	.353	
환경만족도	1.496	[0.872, 2.566]	.143	
생활만족도	1.676	[0.892, 3.152]	.109	
경제활동 여부	4.235	[0.890, 20.149]	.070	†
성별	0.410	[0.140, 1.203]	.104	
혼인상태	0.950	[0.426, 2.120]	.900	
체류기간	0.967	[0.874, 1.071]	.521	
연령	0.980	[0.926, 1.037]	.486	
지역: 영암(논산=기준)	0.403	[0.145, 1.122]	.082	†
지역: 밀양(논산=기준)	1.044	[0.412, 2.649]	.927	
체류자격: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기준)	2.923	[0.700, 12.201]	.141	
체류자격: 정주형(F계열) (단순기능인력=기준)	1.091	[0.237, 5.016]	.911	

** $p<.01$, † $p<.10$. OR=오즈비(Odds Ratio). $N=180$, McFadden Pseudo $R^2=0.160$, LLR $p=.0006$.

에서도 유의한 부(-)의 관계가 유지되었다(OR=0.541, $p=.013$). E-9 체류자로 표본을 한정한 분석(N=124)에서도 모국소속감은 지역 잔류의향과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다(OR=0.443, $p=.004$). 이는 전체 표본에서 확인된 모국소속감과 지역 잔류의향 간의 관계가 F-6 체류자의 포함 여부에 의해서만 나타난 결과는 아닐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모국소속감은 출신국에 대한 주관적 귀속의식을 측정한 변수이며, 본 분석결과를 모국과의 조국적 관계가 지역 잔류의향을 감소시키는 인과적 효과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동네 관계망과 생활만족도에서는 전체 표본과 하위표본 간에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 표본에서는 동네 관계망과 지역 잔류의향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나(OR=1.274, $p=.353$), F-6 체류자를 제외한 분석에서는 동네 관계망이 높을수록 지역 잔류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2.235, $p=.017$). E-9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동네 관계망은 정(+)의 방향을 보였으며(OR=2.106, $p=.050$), 5% 유의수준에는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표본에서 동네 관계망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지역사회 관계가 지역 잔류의향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생활만족도 역시 전체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OR=1.676, $p=.109$), E-9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본국 대비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 잔류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2.282, $p=.049$). 환경만족도 또한 전체 표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OR=1.496, $p=.143$), F-6 제외 모형(OR=1.740, $p=.095$)과 E-9 한정 모형(OR=1.888, $p=.091$)에서 모두 정(+)의 방향을 보였다. 다만 이러한 하위표본별 결과는 체류자격 집단 간 회귀계수의 차이를 직접 검정한 것이 아니므로, 체류자격에 따라 동네 관계망이나 생활·환경만족도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상이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관련성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성별의 경우 전체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OR=0.410, $p=.104$), F-6 체류자를 제외한 모형에서는 남성의 지역 잔류의향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났으며(OR=0.274, $p=.042$), E-9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방향의 관계가 확인되었다(OR=0.216, $p=.040$). 다만 지역별·체류자격별 여성 표본의 규모가 크지 않고 성별과 체류자격 및 업종 등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일반적인 성별 차이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표 8 참조).

표 8. 체류자격 구성에 따른 지역잔류 의향 관련요인 강건성 분석

변수	전체표본	F-6 제외	E-9 한정
모국소속감	0.517**	0.541*	0.443**
한국사회 소속감	0.988	0.723	0.850
지역소속감	0.938	0.869	0.814
동네 관계망	1.274	2.235*	2.106 †
환경만족도	1.496	1.740 †	1.888 †
생활만족도	1.676	1.724	2.282*
경제활동	4.235 †	8.386	-
남성	0.410	0.274*	0.216*
혼인상태	0.950	1.217	1.366
영압	0.403 †	0.379	0.495
밀양	1.044	0.839	0.937
전문인력	2.923	2.567	-
정주형(F계열)	1.091	0.913	-
McFadden R ²	.160	.202	.229
모형 유의확률	<.001	<.001	<.001

* 표의 값은 Odds Ratio(OR)임. 기준지역은 논산임.

E-9 한정 모형에서는 체류자격 변수를 제외하였으며, 경제활동 여부는 표본 내 변이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함.

† $p<.10$, * $p<.05$, ** $p<.01$, *** $p<.001$.

종합하면, 강건성 분석에서도 모국소속감과 지역 잔류 의향 간의 부(-)적 관련성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된 반면, 동네 관계망과 생활·환경만족도의 관계는 분석대상의 구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 잔류의향이 하나의 요인에 의해 일률적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체류자격과 이주배경 등 개인이 처한 조건에 따라 관련요인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체 표본에서 특정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요인의 중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집단 내부의 이질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인 영암군, 논산시, 밀양시를 사례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체류실태와 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잔류의향을 파악하고, 이에 관련된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정착이라는 광범위한 개념 가운데 설문에서 직접 측정된 ‘현재 거주지역 외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회망 여부’를 지역 잔류의향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생활 및 환경 만족도, 동네 관계망, 모국·한국사회·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체류 및 생활 특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표본에서 영암군은 E-9 체류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논산시와 밀양시는 이에 비해 체류자격 구성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평균 체류기간도 논산 6.8년, 밀양 4.8년, 영암 3.0년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하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구성과 체류 특성이 동질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둘째, 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잔류의향은 사례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논산의 잔류의향률은 69.8%, 밀양은 65.2%인 반면 영암은 42.6%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6$). 다만 체류자격과 개인 특성 등을 통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영암의 오즈비가 논산보다 낮은 방향을 유지하였으나 5% 유의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OR=0.403$,

$p=.082$). 따라서 지역별 잔류의향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확인되었지만, 영암의 낮은 잔류의향을 독립적인 지역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영암의 낮은 잔류의향은 체류자격 구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거주환경 등 지역 내 생활여건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모국소속감은 지역 잔류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나타냈다($OR=0.517$, $p=.005$). 이러한 관계는 F-6 체류자를 제외한 분석과 E-9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표본에서 확인된 결과가 특정 체류자격 집단의 포함 여부에 의해서만 나타난 것은 아닐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모국소속감은 출신국에 대한 주관적인 귀속의식을 측정한 단일 문항으로, 송금이나 본국 방문, 가족 및 사회적 네트워크 등 초국가적 관계와 행위를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출신국과의 관계가 지역정착을 저해한다는 인과적 효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넷째, 동네 관계망과 생활·환경만족도의 관련성은 분석대상의 구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표본에서는 동네 관계망과 생활만족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F-6을 제외한 표본에서는 동네 관계망이 지역 잔류의향과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E-9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생활만족도가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 잔류의향에 관련되는 요인이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체류자격과 이주배경 등 집단 내부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본 분석은 집단 간 회귀계수의 차이를 직접 검정한 것이 아니므로 체류자격에 따른 효과 차이를 확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상의 결과는 이론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정착을 단일한 장소에 대한 귀속이나 일방적인 거주국 편입의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 서로 다른 공간적 수준에 대한 소속과 생활조건이 복합적으로 관련되는 과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모국소속감과 지역 잔류의향 사이에 일관된 부(-)의 관련성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초국가주의 이론 자체를 입증하는 결과라기보다 복수의 장소에 대한 소속이 어떠한 조건에서 지역 잔류의향과 상이한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책적으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정착을 지원

하기 위해 하나의 요인에 집중하기보다 체류자격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F-6 체류자를 제외한 표본에서 동네 관계망은 지역 잔류의향과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였으며($OR=2.235, p=.017$), E-9 한정 표본에서도 동일한 방향이 확인되었다($OR=2.106, p=.050$)(표 8 참고). 따라서 취업 목적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착 지원은 고용 연계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밖에서 지역 주민과 교류하고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E-9 한정 표본에서 본국 대비 생활만족도가 잔류의향과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였다는 점($OR=2.282, p=.049$)은 재정·건강·가정생활 등 생활기반의 안정이 E-9 체류자의 잔류와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모국소속감의 부(-)의 관련성은 인과적 방향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책 목표로 삼기보다, 잔류의향이 낮은 집단이 직면한 제도적 제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한 E-7의 잔류의향률이 88.2%로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숙련기능인력 전환 경로 확대와 가족동반 여건 개선 등 체류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횡단면 자료에 근거한 관련성이므로, 잔류의향이 높은 이주노동자가 이웃 관계 형성에 더 적극적이었을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경제활동 여부는 지역 잔류의향과 정(+)의 방향을 보였으나 추정의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고용안정성이나 근로조건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정착과 고용조건 간 관계를 보다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근로계약 기간, 사업장 변경 경험, 임금 및 근로시간, 고용주의 태도, 직무만족도 등의 구체적인 고용 특성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인구감소 지역 가운데 외국인 이주노동자 규모가 큰 영암·논산·밀양 세 지역만을 분석하였으며 비인구감소지역을 비교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인구감소지역으로 일반화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공간적 조건 자체의 효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사례지역이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이미 많이 유입되어 있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지역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잔류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정착

의향이 높은 응답자가 표본에 더 많이 포함되었거나, 반대로 정착 여건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격차로 모국에 대한 소속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인구감소 정도가 상이한 타 지역이나 비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비교연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공간적 조건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속변수는 현재 거주지역 외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회망 여부를 이용하여 측정한 것으로, 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과 출신국으로의 귀환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지역 잔류의향을 실제 장기정착이나 영구정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 또한, E-9 체류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 및 지역 간 이동에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므로, 측정된 지역잔류 의향에는 자발적인 정착 선호뿐 아니라 제도적 제약에 따른 이동 가능성의 제한이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체 표본 규모가 180명으로 제한적이며 지역별·체류자격별 표본 구성에도 편차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여성 응답자는 결혼이민(F-6) 비중이 높은 논산시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남성 중심의 제조업 현장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험은 표본에서 충분히 포착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성별, 체류자격 등이 서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모국 소속감과 같은 단일 요인으로 지역잔류 의향의 차이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체류자격 더미(전문인력·단순기능인력·정주형)는 체류자격 구분에 기반한 것으로, 동일한 체류자격 내에서도 실제 고용의 질이나 사업장 변경의 자유도 등은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체류자격 더미가 이러한 업종 내 이질성까지 포착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지역 간 잔류의향률 차이가 체류자격, 체류기간, 생활환경 등 각 요인에 의해 어느 정도씩 설명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는 표본 규모가 작아 요인별 설명력을 안정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향후 표본을 확대한 연구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국소속감은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어 초국가적 관계의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송금, 본국 방문, 귀환계획 및 초국가적 사회관계망 등을 함께 측정하고 심층면접 등 질적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각 변수의 독립적인 관련성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으며, 변수 간 매개효과나 상호작용효과는 검토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동네 관계망은 잔류의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고용 안정성이나 생활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매개·상호작용 경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註

- 1) 생활인구는 가. 주민등록인구, 나. 체류인구, 다. 외국인(등록외국인, 재외동포 거소신고자)으로 정의
- 2)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기준에 따라 외국인주민 수가 1만명 이상이거나 전체 인구 대비 5% 이상인 시·군·구(행정안전부, 2025)
- 3)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는 2021년에 최초로 도입·시행되었으므로, 2019년 수치는 당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을 대상으로 2021년 지정 명단을 소급 적용한 결과임을 밝혀둠
- 4) 동포 대상 단순기능인력 비자인 H-2(방문취업)는 2026년 2월부터 재외동포(F-4) 비자와 통합 운영 중임. 다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시점은 2024년으로, 통합 이전의 기존 체류자격 기준에 따라 분석을 시행함
- 5) 뉴질랜드 이민청, <https://www.new-zealand-immigration.com/blogs/migrating-is-an-emotional-journey>
- 6)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단순기능인력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은 E-8, E-9이며,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은 E-1, E-3, E-7임. F계열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은 F-2, F-4, F-5, F-6이 모두 포함됨

참고문헌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2011, 이주용어사전, 제2판, 고양: IOM 이민정책연구원.

김연홍, 2017, 외국인 전문인력 정책 합리적 개선 방안, 국무조정실 정책자문자료.

김영란, 2008,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답론* 201, 11(2), 103-138.

박민정·박성일·이완·장흔성·조영희·한기덕·허정원·김수경·김하나·김현미·박동찬, 2023, 「경상북도 인구위기 및 산업수요에 대응한 이민정책 연구」, 안동: 경상북도청.

신지원, 2011, 「이주민 통합과 다층적 통합거버넌스의 개념적 이해」, 이민정책연구원 위킹페이퍼 시리즈(2011-05), 고양: 이민정책연구원.

우영옥, 2023, “외국인주민의 정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취업자(E7, E9, H2)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이민행정학보*, 2(1), 183-206.

유희연·이소현·차미숙·유현아·조은주, 2024,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연구」, 세종:국토연구원.

이원규·이재우, 2025,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만족도와 이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3), 171-194.

이은채, 2025, “외국인 유학생의 인구감소지역 취업과 정주에 관한 사례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4(4), 435-470.

전성윤·전희정, 2024,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동네·도시·국가소속감 비교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40(4), 57-74.

정동재·김지영·한창목, 2019,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조영희, 2024, “한국 이민정책의 발전경로와 도전과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 제5회 콜로키움 자료집.

조하영, 2026, “국내 장기체류 이주민의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과 정주 의향,” *지역사회학*, 27(1), 113-144.

최선영, 2024, “종합적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이민자 유입, 정착, 통합의 단계적 접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시행지역의 외국인정책을 대상으로,” *지역연구*, 40(4), 91-112.

최윤정·전기택·김애라·동제연·정동재·이정민·최영미·송영호·김경주·박성재·노용진·전우성, 2025, 「중장기 체류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전략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최인지·신형진, 2019,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영구정착 의향 결정요인,” *한국인구학*, 42(4), 121-141.

한기덕, 2025, “이주민의 지속 정주의향 예측요인 연구: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이민학*, 12(2), 175-206.

행정안전부, 2025,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4.11.1. 기준), 세종: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Basch, L., Glick Schiller, N., and Szanton Blanc, C., 1994,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Langhorne: Gordon and Breach.

Brown, L. A. and Moore, E. G., 1970, The intra-urban migration process: A perspective,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52(1), 1-13.

Levitt, P. and Glick Schiller, N., 2004,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1002-1039.

Oh, J. H., 2003, Social bonds and the migration intentions of elderly urban resi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residential satisfaction,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2(2), 127-146.

Speare, A., 1974, Residential satisfaction as an intervening variable in residential mobility, *Demography*, 11(2), 173-188.

Speare, A., Kobrin, F., and Kingkade, W., 1982,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bonds and satisfaction

on interstate migration, *Social Forces*, 61, 551-574.

Wolpert, J., 1965, Behavioral aspects of the decision to migrate, *Papers in Regional Science*, 15(1), 159-169.

뉴질랜드 이민청, <https://www.new-zealand-immigration.com/blogs/migrating-is-an-emotional-journey> (2026년 7월 20일 검색)

법무부,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2월 말 기준.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 (2024년 6월 20일 검색)

연합뉴스, 2025년 9월 24일자, “고용허가제 비자 수도권 편중 여전...올해도 36%가 수도권서 발급”

교신 : 유희연, 30147, 세종 국책연구원로 5,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이메일: hyyou@krihs.re.kr)

Correspondence: Heeyoun You, 30147, 5 Gukchaeg-yeonguwon-ro, Sejong-si, National Territorial & Regional Research Division (Email: hyyou@krihs.re.kr)

투고접수일: 2026년 8월 24일

심사완료일: 2026년 9월 25일

게재확정일: 2026년 9월 28일